

2011업무보고 관련 문답자료

2010. 12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목 차

1. 축산업 허가제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1
2. 거점지역 진단실험실은 왜 필요한가?	2
3. 가축질병 발생농장의 보상금 삭감 방안은?	3
4. 가격안정대와 주의·경계·위기 단계별 조치사항은?	4
5. 정가·수의 매매 활성화의 개념 및 시행방안은?	5
6.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방안은 무엇인지?	6
7. 플래그십 한식당 개설방안은?	7
8.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8
9. 쌀 수급안정화 대책과 효과는?	9
10. R&D 컨트롤 타워가 왜 필요한지?	10
11. R&D CRO-CMO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11
12. 해외농림어업개발의 민관합동 참여방식(PPP)은 무엇을 말하며, 필요성은?	13
12-1. 필리핀 MIC 모델은 무엇인지?	
13. 어업분쟁전담기구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18
14. 갯벌 참굴과 해상 시범양식 추진 취지는 무엇인지?	19
15. 농식품투자조합 개요 및 운영방식, 필요성은?	20
16. 농어촌 활력 창출을 위한 범국민 운동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22
17.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은?	23
18. 농업관측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24
19. 농어업보조금 개편 방안은?	26

문1) 축산업 허가제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 ☐ (도입 배경)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소홀 등으로 구제역, AI 등 악성질병이 발생하거나 인근지역으로 확산
 - 금년에 발생한 구제역은 축산농가 해외여행, 외국인 근로자 관리 소홀 등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고
 -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 및 출입통제 미흡으로 인근 지역으로 확산
 - 악성가축질병 발생 책임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도 축산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제재사항이 없어 축산농가의 책임의식 및 가축방역에 대한 참여의식 결여
- ☐ (주요 내용) 기존 축산업 등록제를 축산업 허가제로 변경하여 농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뿐만 아니라 소규모농가까지 의무 교육을 도입
 - 허가 대상 :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에 감수성이 예민한 우제류, 조류를 사육하는 농가 중 사육면적이 50㎡이상인 농가
 - * 우제류: 소·돼지·닭·오리·산양·면양·사슴, 조류: 칠면조·거위·메추리·꿩·타조
 - 차단방역, 환경관리, 분뇨처리 등 축산관련 기본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일정시간 교육 이수 의무화
- ☐ (추진 상황) 생산자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률 개정(안) 마련, 내년 10월에 국회제출 계획

문2) 거점지역 진단 실험실은 왜 필요한가?

- ☐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초기에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함
 - 특히 구제역, AI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은 그 무엇보다도 신속한 정밀검사 필요
- ☐ 현재 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소재)에서만 재난성 가축전염병에 대해 진단이 가능한 실정임
 - 지방에서 의심축 신고가 있어도 최종 진단을 위해서는 경기도 안양으로 가검물을 이송함에 따라 일정 시간이 추가 소요
 - 또한, 검역원의 진단 시설도 검사 능력에 한계가 있어 동시 다발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검사가 지연
 - * 검역원에 시료가 도착되면 평시에 8시간 소요되지만 시료를 증가(100건이상)하면 12~24시간 소요
- ☐ 지역별 거점을 정하여 정밀 진단시설(생물학적 안전 차폐시설)을 설치, 최단기간내 검사 및 질병진단 능력 향상 도모
 -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각 1개소씩 진단 실험실 설치 추진

문3) 가축질병 발생농장의 보상금 삭감 방안은?

-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신고, 소독, 이동제한 및 살처분명령 등 방역의무를 해태한 농가는 20~60%까지 감액 지원
- (신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60% 감액
 - (조치이행) 소독, 이동제한, 살처분명령 미이행 시 20~60% 감액
 - * 신고 및 조치이행 기준에 따른 감액요인이 중복될 경우 감액이 큰 경우 적용
- **향후**, 축산농가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신고·소독 등 방역의무 미이행 시 **보상금 삭감**
-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후 신고·소독 조치 미이행 시 최대 60% 감액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및 교육·소독 미이행시 20% 감액
 - 농장을 출입한 수의사·인공수정사·동물약품·사료·분뇨·툽밥 차량 등에 대한 소독기록이 미흡한 경우 20% 감액

문4) 가격안정대와 주의·경계·위기 단계별 조치사항은 ?

□ **가격안정대와 위기구간**

- **안정대** : 5년평균가격 대비 실제가격 변동율의 평균(표준편차) 이내 범위
 - 상승 : (주의) 표준편차의 1~1.5배 → (경계) 1.5~2배 → (위기) 2배이상
 - 하락 : (주의) 생산비 이하 → (경계) 중간수준 → (위기) 경영비 이하

□ **위기구간별 조치사항**

① **파종전-파종 단계**

	단 계	조 치 사 항
부족	위 기	○ 해외 계약재배 실시
	경 계	○ 계약재배 규모 확대
	주 의	○ 해외시장 수입 가능성 조사
과잉	위 기	○ 묘 폐기 등 재배면적 감축
	경 계	○ 타 작물 전환운동 전개
	주 의	○ 관측정보 제공 등 자율 면적 감축 유도

② **생육단계**

	단 계	조 치 사 항
부족	위 기	○ 해외 계약 물량 수입계획 수립
	경 계	○ 해외시장 수입선 사전확보
	주 의	○ 계약재배 물량 출하계획 조정(동외품 출하방안 등)
과잉	위 기	○ 품목단체의 저급품 자율폐기
	경 계	○ 계약재배 물량 출하계획 조정(가공용 출하확대 방안 등)
	주 의	○ 조기수확을 통한 물량 감축(통배추→묵음배추)

③ **출하단계**

	단 계	조 치 사 항
부족	위 기	○ 수입, 할당관세, 도매가격 상승을 제한
	경 계	○ 계약물량 조기출하, 할인판매
	주 의	○ 규격외품 출하유도
과잉	위 기	○ 유통명령, 과잉물량 저장·가공
	경 계	○ 유통협약에 의한 자체 시장격리
	주 의	○ 계약물량중 저급품 출하억제, 수출

문5) 정가·수의매매 활성화의 개념 및 시행 방안은?

- ☐ (개념)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의 의견을 받아 중도매인과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수의매매)하거나 정찰제(정가매매)로 판매하는 방법
 - (효과) 경매제에 비하여 가격진폭을 완화할 수 있고 경매대기 시간 불필요 및 하역비 등 유통비용 절감 가능
- ☐ (시행방안) 정가·수의매매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과 동등하게 규정하여 출하자(농가)가 매매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현재 농안법에는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가·수의매매는 예외적으로 인정
- ☐ (보완조치) 정가·수의매매 확대시 거래의 불투명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전파 제공 시스템 강구 검토

문6)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방안은 무엇인지?

- ☐ 계약재배 및 공동구매 중심의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와 사이버 거래를 활성화하여 고품질의 식재료 공급을 확대할 계획임
- ☐ 이를 위해 2011년에는 우수 농수산물의 학교급식 공급확대와 지자체 모범사례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
 - (대상)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지자체 5개소
 - 대상 지자체는 1월중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
 - (지원내용)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저온저장시설·냉장차량, 농어촌 체험·교육비용, 식재료 표준규격 컨설팅 비용 등
- ☐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6월)을 마련하여 2012년부터 우수 식재료 공급을 확대 실시할 계획임
 - 농식품부, 교과부·교육청, 지자체,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협의체'를 구성하여 선진화 방안 마련
 - 효율적인 계약재배 및 공동구매를 위해 교과부·교육청과 협조하여 지역산 제철 농수산물을 활용한 '표준식단제' 보급을 추진할 계획임
- ☐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 (aT 사이버거래소) 사용을 활성화하여 식재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및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임
 - 전자조달 시스템은 식재료 조달 기능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식재료 접수 기준을 제공하고 엄격한 납품업체 관리 실시
- ☐ 중장기적으로 현행 학교 단위의 수급체계를 3~5개 시·군의 학교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거점체제로 개편을 추진
 - 기존 유통·물류시설(APC·RPC·LPC,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지역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

문7)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방안은?

- ☐ 한식은 건강식·웰빙식으로 세계화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가 이미지가 여전히 존재
 - 명품 한식과 세련된 한국 문화를 함께 홍보하고 한식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고급 한식당 설립이 필요
- ☐ 플래그쉽 한식당은 민관 협력방식의 공동투자를 통해 매입 방식으로 개설하고 운영이 안정화되면 민영화하는 것이 정부 방침
 - 장소는 뉴욕 등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미국내 지역으로 우선 검토
 -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현지 한식당 및 국내 외식 전문기업에 제한 없이 투자 기회를 제공
 - 운영은 전문 한식 경영업체에 위탁하여 전문성·효율성 확보
- ☐ 현재 전문기관 연구용역(세종대, '10~'11.3)을 통해 식당규모 및 입지, 식당 운영방식, 메뉴구성, 홍보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
 - 내년 4월까지 한식당 설립 계획을 수립

문8)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 ☐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한 가격조정제 등 거래 제도 개선 (농안법 개정 추진)
 - 무·배추 출하예약제 시범실시('11년 가락시장 대상)
- ☐ 유통 효율성 증대를 위한 거래제도 개선
 - 경매제 보완을 위해 정가·수의매매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과 동등하게 규정
 - 시장도매인제 확대 기반 마련
 - 우선, 중앙도매시장에 반드시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개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유도
 - *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를 단축(2단계 → 1단계)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제조건인 정산조직의 운영상황과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 ☐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유통종사자의 경쟁촉진 강화
 - 시장도매인·상장의 품목 중도매인과 출하자 간 제3의 대금정산 조직 신설
 - 도매시장 평가제도를 현행 전국단위 평가에서 시장별·권역별 평가로 개선

문9) 쌀 수급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과 효과는?

- 쌀 수급안정 대책은 “쌀 공급축소,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소비확대”를 추진하여 “과잉 생산구조 해소, 쌀 수급균형 달성” 효과를 기대
 - 쌀 공급축소를 위해 논에 타 작목재배, 조기관세화를 추진
 - ‘13년까지 매년 4만ha의 논에 콩·옥수수 등 타 작물을 재배하여 쌀 20만톤의 공급을 축소
 - 2012년 관세화를 위한 논의를 11년 내에 마무리하여, ‘15년 이후 매년 6만톤의 수입쌀 감축
 - 쌀의 생산과 공급량이 줄어드는 만큼, 국가재정부담이 감소
 - * 12년 관세화로 ‘14년까지 794억원 절감
 - * 타 작목재배로 쌀 20만톤 매입·격리에 비해 4772억원 절감효과
- ⇒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15년 밥쌀 재배면적을 70만ha로 축소하여 쌀 과잉생산구조를 해소, 수급균형 달성
-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R&D 지원, 원료공급체계 구축 추진
 - 5대 분야 55개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지원
 - * 5대분야 핵심과제 : 기능성·가공용 품종(12종), 쌀제품 가공기술(15종), 가공기기(8종), 쌀·부산물 이용 신소재(8종), 가공제품 품질제고(12종)
 - 1단계로 3년간 정부쌀을 할인 공급하고 2단계로 가공용 쌀 전용 재배단지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원료 공급 달성
 - * 가공용쌀 전용재배단지 : (‘11) 1천ha → (‘13) 1만ha → (‘15) 3만ha
- ⇒ 이를 통해 가공용 쌀 소비를 15년 60만톤까지 확대하여 쌀 생산량의 15%를 가공용으로 소비

문10) R&D 컨트롤 타워가 왜 필요한지?

- 농림수산식품 관련 R&D는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등 기관별 분산 추진되어, 정책 연계성 및 효율성 저하, 중복성 문제
- 농식품 R&D의 방향성 정립 및 미래준비를 위해 기관간 역할 분담·조정 등 필요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중심으로 농식품분야 R&D 컨트롤 타워 구축
- 농식품 R&D 주요정책, 예산투자방향, 성과관리 등 검토

문11) R&D CRO · CMO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 농식품 분야는 민간부문의 연구기반이 취약한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민간연구 서비스 제공 필요
 - 산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화하는데 필요한 실용 · 산업화 연구를 대행(CRO*)하거나, 시제품의 위탁생산(CMO**)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
- *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 품질·기능성 분석, 임상시험 등 전문연구대행 조직
- **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 시제품 생산, OEM·ODM 등 위탁생산 전문 조직
- CRO · CMO 육성을 통해 농식품 산업현장에서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로 수익이 창출되고, 다시 기술개발에 재투자 될 수 있는 R&D 선순환 구조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참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 농식품 R&D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발족(09.4.15)
 - 농식품 R&D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연구개발 사업 평가, 예산투자방향,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구성 : 위원장(1차관, 민간위원장), 당연직(4), 민간위원(29) 등 35명
 - 5개 분과위원회(기획조정, 생산기반, 안전유통, 종자생명, 녹색자원환경)
 - * 설치근거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제5조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분과위 기능 강화
 - 농진청 · 산림청 및 소속연구기관 기획담당자로 구성된 '기획조정분과' 신설로 정책연계성 제고, 기술전문분과위는 기술·산업분야를 고려하여 4개 분과위*로 재편
 - 농림수산식품 분야 R&D 예산배분 및 사업추진 내용 검토
 - 분과위 자체적인 의제를 발굴하여 상정

문12) 해외농림어업개발의 민관합동 참여방식(PPP)은 무엇을 말하며, 필요성은?

- 민관합동 참여방식(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란
 -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진출시 민간투자 이전에 정부간 협의를 거쳐 사업지역, 규모 등을 협의하고 민간기업이 투자를 하는 사업 모델임
- 그 필요성은
 -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진출할 경우, 토지확보 지연, 해당국의 사업승인 지연 등의 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를 정부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모델임

문12-1) 필리핀 MIC 모델은 무엇인지?

- 농업을 중심으로 관련 제조업, 녹색 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포괄된 복합산업단지(MIC:Multi-Industry Cluster)임
 - 정부간 협력으로 대규모 토지 임차 후, 지역별로 농업을 주축으로 특색 있는 산업이 결합된 단지 조성
 - 우리의 풍부한 개발경험을 활용, 필리핀의 풍부한 농업잠재력을 토대로 여타 주변 산업과 녹색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발전
- 현지여건을 감안, 곡물분야부터 착수 후 점진적으로 전·후방 산업을 연계하여 규모화·복합화할 계획임
 - ※ 사업내용(안)
 - 건조·저장시설(10만톤) 조성, 농장개발(3천ha), 지역 농산물 계약재배(12천ha)·수집(15천ha), 바이오산업 등
 - 사업규모 및 내용은 민간기업 참여도, 정부간 협의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09.5.30,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로 필리핀의 요청에 의해 추진 중인 "필리핀 복합산업단지(MIC)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KOICA, '10.4~'11.3)와 연계 추진 중
 - 11년도 상반기에 민간기업 모집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사업 착수할 계획임

참고

필리핀 복합산업단지(MIC) 시범사업 추진현황

1. 사업개요

KOICA에서 타당성조사('10.4~'11.3) 중인 MIC 사업지구의 일정 규모(3만ha 수준)를 정부·민간 협력방식(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으로 시범사업('11~12년) 추진

- 사업규모 : 30천ha(연간 옥수수 300천톤* 생산·유통)
 - * 30천ha의 농지에서 옥수수 2기작 재배 물량(5톤/ha/1기작 기준)
 - 개발계획 : 저장·가공 시설(10만톤 규모), 농장개발(3천ha, 10%), 계약재배(12천ha, 40%) 및 수집(15천ha, 50%)
 - 농업기술, 교육·의료, RPC, 도로·소수력발전소 건설(ODA사업)
 - 농산물 가공·유통, 연관산업(종자·농기계 등), 레저 진출(민간투자)
 - ※ 현지조사 결과, 경제성, 민간참여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고려하여 사업 규모 및 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
 - 소요예산 : 193,563백만원
 - (재원)농지관리기금, ODA(무상원조, EDCF), 수출입은행 융자, 민간투자
 - 사업기간 : 2011 ~ 2012년 (2년간, 유통시설 및 농장 기준)
 - 추진방식 : 정부·민간 협력방식(PPP)
 - 국가간 협의로 확보한 대규모 단지에 대해 민간투자자는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종자·농기계 등 연관 산업에 진출하고,
 - 정부는 ODA 사업과의 연계를 포함한 금융·외교적 지원
- ⇒ 민간투자를 토대로 정부·민간 협력 방식의 지속가능하며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 모델 정립

2. 추진현황

- '09.5.30,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필리핀 복합산업단지 (Multi-Industry Cluster) 조성 타당성 조사사업" 외교장관 간 MOU체결
 - 필리핀의 공식요청으로 KOICA사업채택 및 사업자 선정('10.3월)
- '10.6.3, MIC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옥수수 30만톤 규모의 생산 또는 유통계획(3만ha규모) 및 ODA사업 등 종합계획수립
- MIC 적지 선정을 위한 민·관 합동의 현지 조사 실시
 - (기간) '10.7~10월
 - (참여) 농식품부, 외교부(대사관), 농어촌공사, 농경연, 농협 사료, 한진중공업, 대우인터내셔널 등
 - (조사내용) 필리핀에서 MIC후보지로 제공 가능하다고 제시한 6개주에 대한 관계자 면담 및 현지 확인
- '10.11.25, 한·필리핀 MIC 개발 협력 포럼 개최(KOICA, 서울)
 - MIC사업에 대한 대외인지도 강화 및 관련기업의 관심제고
 - * 필리핀측 상원의원, 농업부 등 60여명과 한국측 관계자 총 200여명 참석

< 필리핀 추진 현황 >

- MIC 개발을 위한 후보지 제시('10.10) : 5개주 49,174ha
 - ※ 개발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세부조사가 필요
- 필리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2011~2015)"에 MIC사업계획 포함 추진
 - ※ '11.2월중순 발표를 목표로 현재 대통령 재가 중으로 세부 내용은 비공개
- MIC관련 Steering Committee 구성
 - 경제개발청, 농업부 등 관련 기관 고위급으로 MIC추진 위원회 설치 예정
 -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발표와 함께 가동될 것으로 예상

3. 향후 추진 계획

☐ MIC 사업모델 마련 및 국내 관심기업에 대한 설명회('11.1)

- MIC 진출 가능지역에 적합한 사업모델 마련
 - 6개주에 대한 KOICA, 농촌공사의 조사 결과 활용
 - ※ 우선 가능사업 : 농장, 건조·저장시설, 사료공장 등
- 지역별 개발 가능 모델을 제시하고, 관심기업의 진출에 필요한 요구 사항 조사

☐ 사업추진을 위한 한·필리핀 워킹그룹 구성('11.1)

- 한·필리핀 국가별 투자유치를 위한 역할 분담 및 '11.1 Road show 협의 등
- 향후 추진계획 협의 및 현안문제* 해결 모색(지속)
 - * 외국인 투자지분, 토지임대조건, 진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수출 등

☐ MIC 사업 Road Show 개최('11.2)

- 필리핀 주관으로 MIC지역 투자에 대한 필리핀의 투자유치 전략, 투자인센티브 등 정보제공

☐ 세부조사, 사업계획 수립 및 착수준비('11.6)

- 세부조사, 사업계획 수립은 사업진출 예정 기업 위주로 실시하되, 관련 전문가 지원
 - ※ 계획수립 후 해외농업개발사업 용자지원 절차에 따라 용자지원('11년 MIC 예산: 90억원)
- 도로 등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반시설 발굴 및 필리핀 측과 협의(EDCF, KOICA 사업 등)
 - 농업분야는 관련 공무원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농촌개발, 농업 기술 등 전수), 농기계 지원 사업 등 추진

문13) 어업분쟁조정전담기구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 ☐ 한정된 어장에서 경쟁적 조업으로 인해 갈등요인이 상존, 특히 EEZ 체제이후 조업어장의 축소로 어업간 갈등 및 분쟁 심화
- 41개 업종 53천척의 어선이 연근해 어장에서 조업함에 따라 업종간 갈등 내재
 - 근해어선은 연안어장에서, 연안어선은 근해어장에서 조업하는 등 어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특정어종(멸치, 오징어, 저서어류 등) 어획이 집중되어 업종간 갈등 심화
- ☐ 현행 어업분쟁 조정기구 현황
 - 현행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중앙, 시·도, 시·군)가 설치되어 있으나 동 위원회에 조정결과를 담보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강력하고 적극적인 어업조정 곤란
 - '중앙 수산조정위'는 법령 제·개정, 구획어업 승인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 중심, '시·도 수산조정위'는 수산정책사업(계획 안) 심의 위주로 운영
 - 어업분쟁은 대부분 해역별 어업여건과 특성에 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어업조정기구가 미비한 실정
- ☐ 어업분쟁을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신속한 조정을 위해 현행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보완 및 해역별 어업조정기구 설치필요

문14) 갯벌 참굴과 해삼 시범양식 추진 취지는 무엇인지?

- 서·남해안의 우수한 갯벌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 개발 및 수출 증대
 - 세계 5대 갯벌에 해당하는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정착생물 채포 위주 등 소극적 이용
 - 서·남해안 갯벌 자원을 활용한 무급이(無給餌)·친환경 양식을 통해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 개발
 - 특히 갯벌을 활용하여 수출 잠재력이 큰 갯벌참굴, 해삼을 시범 양식함으로써 향후 수산물 수출 증대에 기여
- 이와 더불어, 유류피해지역 어업인들에 대한 안정적 소득원 마련
 -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향후 계획
 - 종묘공급 및 양식, 가공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 이를 활용한 시험 생산 후 수출까지 전 과정 시범 추진
 - 연구기관 주도, 어업인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사업으로 '종묘+양식+가공+수출' 연계 복합사업모델 개발

< 조성규모 >

	2010년		
	20ha	5ha	15ha
해삼	20ha	5ha	15ha
갯벌참굴	5ha	3ha	2ha

문15) 농식품투자조합 개요 및 운영방식, 필요성은?

□ '농식품모태펀드' 개요

- 모태펀드 개념
 - 전체 출자자금을 하나의 펀드(母펀드)로 결성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을 통해 펀드운용사가 결성하는 투자조합(子펀드)에 출자하는 펀드
 - ※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기업에 직접투자하기 보다는 개별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직접투자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목적으로 운영
- 추진경과
 -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시행('10.5.26)
 -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지정('10.6.24)
 - '농식품모태펀드' 결성('10.9.30) 및 5개 자펀드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선정 완료('10.11~12월)
- 모태펀드 조성·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금 등의 출자를 통해 조성
 -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통해 모태펀드 자산관리 및 운용
 - 조성규모 : 1조원('20년까지 출자), 존속기간 : 30년
 -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펀드(농식품투자조합, VC, PEF 등)를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농식품모태펀드에서 투자자금을 출자
 - 경영혁신, 기술개발 등 민간의 선진 경영기법 도입 및 체질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
 - ※ 농식품모태펀드 모태펀드 출자: ('10년)597억원, ('11년) 500억원

□ '농식품모태펀드' 필요성

- 농업의 규모화, 고부가가치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첨단농업, 녹색성장산업 및 식품산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 발생
 - 대규모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정부주도의 재정 투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투자 확대 필요성 증대
- 농어업인 육성 및 농림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 공급로 확보
-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까지는 “길을 터주는” 정부의 안내자 역할 필요
- 농어업의 특수성을 감안,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간 기재로서의 정부의 안전판 역할 필요

□ '농식품모태펀드' 운영방식

- ◆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고려하여 모태펀드 자산을 운용
- 모태펀드의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민간투자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

- 자조합 총결성액 중 정부출자비율을 일정비율(5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 대상 및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출자비율을 달리 정하여 출자
 - 민간자본 유치가 비교적 수월한 분야(예: 식품)에 대해서는 출자비율을 낮게 설정하고,
 - 생산·유통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민간의 참여 유도
- 농식품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조합 결성금액의 일정비율(시행령 : 60%)이상을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도록 함
 - 특히,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어 투자되지 않도록 중소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시행령: 20%) 이상을 투자
 - * 상용근로자 수 100인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자(시행규칙)

문16) 농어촌 활력 창출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 농어촌은 일자리 부족으로 젊은층이 농어촌을 떠나게 되고, 이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서비스 기반 약화로 연결되어 활력이 더욱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리더를 중심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이 활성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의 성공요인으로는 지역리더의 창의와 책임의식, 주민의 자발적 참여, 귀촌자의 기여 등을 들 수 있으며
 - 농어촌 유무형 자원(지역 특산물, 경관, 생태환경, 전통문화 등)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성공한 지역이 많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창의적·도전적 의식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농어촌을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임
 -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되도록 자율·창의·책임의식을 갖춘 정예 인력 10만명을 육성하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 중앙과 지자체에 범국민운동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마을 단위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
 - 이러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우수 마을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집중지원하고, (가칭)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을 시상

문17)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은?

- ☐ 지역주민이 공동체조직을 만들어 지역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
- 고령화되고 소득이 낮은 농어촌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적극적 복지를 실현하는 의미도 있음

※ 농어촌 공동체회사 개념 :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

- ☐ 농어촌 공동체회사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교육 등 강화
 - 우수사례 발굴·보급, 안내책자 발간, 워크숍 개최 등 추진
 - * 양양 송천 떡마을 : 부녀자 15명, 1인당 월 평균 170만원 수준 소득
 - * 완주 안덕 체험마을 : 노인 15명, 1인당 월 평균 30만원 수준 소득
- ☐ 상담, 교육·컨설팅 알선, 모니터링 등을 위한 지원센터 개설('11.2월)
 - 수시로 농촌 공동체회사의 애로사항을 청취, 제도개선 추진
- ☐ 지역발전 기여도, 주민참여 정도 등을 심사, 공동체회사 사업 중 우수사업을 선정(54개소, 3월)하여 지원(개소당 50백만원)
 - 시·도, 공동체회사 등 의견수렴 후 사업시행지침 시달(1월)
- ☐ 고용노동부와 협력, 농어촌 분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지원
 - MOU체결('10.10), 모델 발굴을 위한 전문가 TF 구성·운영 중

문18) 농업관측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 농업관련 전문 기상정보 생산·제공 <신설>
 - 농촌진흥청과 기상청이 협조하여 농업기상정보를 생산, 농업관측 센터에 제공(월 3회, 10일 간격)
- ☐ '농업관측기동반' 신설 및 '속보' 발간체제 개선 <신설>
 - 기상변동이 심한 여름철(6-9월)에 '농업관측기동반'을 탄력적으로 현장(고랭지지역)배치하여 작황·출하동향 등을 신속·정확히 조사
 - 관측기동반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속보를 신속 제공(15일→10일)
- ☐ 시세 예측기법 제고 등 농업관측 품질·서비스 향상
 - 관측 품목의 표본규모 및 조사 대상지 정비·향상(표본재설계 조정)
 - 시세예측 정확도 제고를 위해 기존 중앙자문회의에 별도의 비공개 분과회의(생산자 - 유통인 - 대량 수요자)를 신설
 - 기상급변 등 다양한 변동요인을 고려한 시세예측 모형(프로그램) 자체연구 및 기존 모형 개선 추진
 - 농업관측관련 정보생산기관(통계청, 기상청, 농업관측센터 등)과의 워킹, 연구발표회 개최 활성화로 관계기관 협력 및 정보공유 강화

참고

농업관측센터 운영 현황

□ 목 적

- 주요 농축산물에 대하여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소비동향 등을 조사·제공함으로써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에 기여

□ 설립근거 및 조직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5조
※ '99년 1월 KREI에 농업관측센터 설치
- 농업관측센터장 및 5개팀, 센터장을 포함 47명(위촉직 16명 포함)

□ 예산 현황(정부출연금/ 백만원)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업관측사업	3,218	3,450	3,948	4,418	4,519	5,320	5,136

□ 농업관측의 종류

- 단기관측 : 1~2개월 후의 수급과 가격전망(31개 품목)
- 중기선행관측 : 3~6개월 후의 수급과 가격전망(6개 품목)
- 중기관측 : 「농업·농촌경제동향」 매분기(연 4회)
- 장기관측 : 5~10년의 중장기 전망(매년 1월 농업전망대회 개최)

□ 관측대상 품목(31개 품목 : '10년 2개(버섯, 오리) 추가)

- 채소류 : 11개(배추, 무, 마늘, 양파, 건고추, 감자, 풋고추, 당근, 양배추, 파, 버섯)
- 과일류 : 6개(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 과채류 : 6개(수박, 참외, 오이, 딸기, 토마토, 호박)
- 곡물류 : 2개(쌀, 콩)
- 축산류 : 6개(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 중기선행 관측대상 품목(6개 품목 : 배추, 무, 양파, 파, 돼지, 육계)

- ※ 2011년 10개 품목으로 확대·시행(추가 : 마늘, 고추, 오이, 호박)

문19) 농어업 보조금 개편방안은 ?

□ (현황 및 문제점) UR 타결 이후 3차례 종합대책 및 투융자계획을 수립, 추진

※ 투융자 : 1차(42조, '92~'98), 2차(45조, '99~'03), 3차(119조, '04~'13)

- 시장개방 여건하에서 생산·유통 인프라를 정비하고 영농의 규모화 진전 및 지역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 정부 의존적 경향이 심화되면서 농업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예산·기금 집행 및 관리체계에 비효율적 요인 등이 존재

□ (개편방안) 농어업분야 지원수준은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농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 ①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성장동력 분야에 투자 확대
- ② 경영체 규모·성격에 따라 산업적·복지적 지원으로 명확히 구분 운영
 - (대규모 농가) 보조지원 단계적 폐지하고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소규모 농가) 복지지원 확대
 - (산업적 지원 : 경쟁력 강화) : 경쟁촉진, 비즈니스 모델개발, R&D 지원, 재해보험, 경영위험관리, 소득안정직불 도입 등 다양한 산업정책 개발
 - (복지적 지원 : 서민대책) : 직불금 확충 등 생활안정망 구축, 농촌 사회 유지, 고령농 대책
- ③ 정책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집행·관리 체계 구축